

## 지역사회 뭉쳐 주민생존권 지켰다 감만부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백지화



### 부산항만공사 비공개로 감만부두에 연말까지 설치하려다 “2km 내 2만4000명 거주” 주민·구청·정치권 반발에 철회

부산항만공사(BPA)가 감만부두에 주민 안전에 저명적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비공개로 추진하려다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신축 계획을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주민 안전’이라는 대의를 함께 한 남구청, 주민대표,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자칫 남구 지역 전체를 공포로 몰아갈 뻔했던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부산항만공사가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연말까지

감만부두 2번 선석(약 4000m)에 신축하려 한다는 기사가 지난 5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저장소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서 등급 6.1, 8, 9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따로 보관하는 시설로 부산항만공사는 5월중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내년부터 저장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안을 접한 남구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설치 반대 및 사업 중단을 부산항만공사에 요구했다. 감만부두 2km 내에는 감만·용당동 주민 2만4000여

명, 1만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다 기존의 한국셀슈어, 현대오일뱅크 등 저유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2차 폭발 위험 가능성이 높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입지로는 맞지 않다. 더욱이 부산항만공사는 저장소 설치와 관련해 구청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도 전혀 갖지 않았다.

이에 남구청장은 지역대표 80여명과 함께 지난 5월 20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구의회도 다음날 감만부

두 일원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해양클러스터 사업 등 대규모 개발예정 지역으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하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도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탰다. 해당 지역구 남구를 국회의원은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저장소 입지 선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내부 검토 끝에 감만부두 내 저장소 설치를 전면 철회하기로 이르렀다.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시설은 앞으로 도 공민화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해 나갈 것이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부산항만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 한통 레미콘공장 사태 마침내 끝났다

### 주민·업체 상생협력협약 체결… 소음·분진 대책 마련 약속 공공갈등전담부서 투입 등 남구의 ‘보이지 않는 노력’ 성과

지난 1년간 주민과 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으로 끝이 보이지 않았던 한통 레미콘공장 사태가 대화 중재자로 나선 남구청의 끈질긴 대화와 중재로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면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한통레미콘공장 설립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충기)와 (주)한통건설(사장 한병인)은 남구청의 중재 아래 5월 31일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모두 봉합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분진·소음·방지대책 마련 △유해물질 배출 측정 및 주민공개 △레미콘 차량의 우암로 통행 금지 △지역사회 공헌사업 전개 등으로 반대위, 한통, 남구청 3자는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지난해 레미콘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하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결사반대하며 공장설립반



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등 맹목하게 대립해 왔다.

한통레미콘공장은 2018년 12월 건축물(지상5층, 2개동 연면적 2,999.84㎡)을 준공하고 남구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냈지만 남구청은 올해 1월 주민 반대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 불가처리 통보를 했

다. 이에 반발한 한통은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남구청이 패소했다. 이에 반대위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은 공장 철거를 주장하는 등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에 남구는 지역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 16개구·군

#### ■ 한통레미콘 사태 경위

공장 규모 : 지상 5층, 2개동  
(연면적 2,999.84㎡)

- 2016. 12. 1. 공장설립 승인.
- 2017. 7. 7. 착공신고.
- 2018. 12. 공장 준공.
- 2019. 1.29. 남구청 사용승인 불가(공장 인근 주민들 사용승인 반대 민원).
- 2019. 2.15. 한통, 부산시에 행정심판 접수.
- 2019. 4. 9.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이용).
- 2019. 4.26. ~비대위 반대집회 등 반발. 남구청 대화중재자로 (주)한통건설과 반대위측 지속적 설득·중재.
- 2019. 5.31.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

최초로 조직한 갈등관리전담부서(주민소통감사관)와 정책비서관을 긴급 투입해 양측의 대화와 중재를 이어갔다. 한통에는 소음·분진 등 환경 문제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공개를 주문하는 한편, 반대위측에는 원만한 합의를 수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돼 이번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 남구 종량제 봉투가격 7월부터 최대 10% 인하

관외 전입세대 기존 종량제봉투 사용도 허용

10ℓ 430→390원, 20ℓ 850→770원

남구는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9종(재사용 2종 포함) 가격을 내달 7월 1일부터 인하한다. 인하폭은 10ℓ는 430원에서 390원, 20ℓ는 850원에서 770원 등으로 규격별 9~10% 내외이다.

이는 각종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 및 자영업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종량제봉투는 7월 1일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마대는 가격 변동이 없다.

□ 종량제 봉투가격 인하 내용

용도	규격	기존가격	인하가격
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포함)	5ℓ	220원	200원
	10ℓ	430원	390원
	20ℓ	850원	770원
	30ℓ	1,280원	1,150원
	50ℓ	2,070원	1,860원
	75ℓ	3,080원	2,770원

구로 전입하는 세대가 전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전입시 동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해당 종량제 봉투에 인증용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매수는 세대당 10매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남구의 가수왕은 누구 6월 22일 전국노래자랑 촬영

6월 5~14일 참가 접수

KBS 전국노래자랑이 오는 6월 22일(토) 남구에서 촬영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상부체육공원에서 본선 진출팀과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은 6월 20일 오후 1시부터 부경대학교 대학강당에서 열린다. 전국노래자랑 예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6월 5~14일 각 동주민센터나 남구청 문화체육과(☎607-4062)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전국 노래자랑 ‘남구편’은 8월 중 방영 예정이다.



## ‘첫단추’ 채운 오륙도선 트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6월 국토부 승인 신청

부산의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국내 1호 트램(Tram·노면전차) 오륙도선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실증노선 오륙도선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관련해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울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 오륙도선은 기존 2017년 수립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가 오륙도선이 포함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첫단추가 채워진 것이다.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6월 중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오륙도선 실증노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 등을 마칠 예정이다. 내년 노선 착공에 들어가는 2021년 연말까지 완공, 2022년부터 상용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륙도선 실증노선은 총길이 1.9km로 용호삼거리(경성대역)~부경대~TBN교통방송국(대연자이아파트)~남부운전면허시험장(LG메트로시티)~이기대어귀삼거리 5개 지상정거장이 설치된다. 트램 차량가지는

#### ■ 오륙도선 실증노선

- 총연장 1.9km 정거장 5개소
- 용호삼거리~부경대~TBN교통방송국~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기대어귀삼거리
- 총사업비 470억원
- 2022년 일일승객 9570명(예상)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 둔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265억원, 초기 차량구입비 140억원 등 470억원이 예상되며 모두 국비와 시비로 충당된다.

오륙도선에 투입될 트램은 전력공급선을 얹고 내장형 배터리로 주행하는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5개 정거장을 모두 통과하는 데 6분30초 정도 소요된다. 상용운행이 시작되는 2022년에 하루 9570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오륙도선 실증노선 한해 운영비용은 48억원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쓰인다.

오륙도선 실증노선이 상용화되면 이기대삼거리에서 오륙도SK하이파트 3.25km 잔여구간 건설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용호부두, 시민 친수공간 만든다

남구청 등 5개 기관 기본업무협약… 6월 마스터플랜 용역

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진 용호부두가 상업적 개발 대신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부산시와 남구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5개 유관기관은 지난 5월 13일 ‘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용호부두 주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용호만 일대를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내실을 다지고 품격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호부두 개방 시 우려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은 남구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안전관리를 설치하고 관리원을 배치해 예방하기로 하고 안전조치를 마친 뒤 용호부두 일원을 우선 친수공간(주차장, 보행로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은 인근 용호부두, 용호만 매립부두, 하수종말처리시설(예정지), 설치리, 이기대공원, 공영수련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종합적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중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용호부두는 6월 4일부터 화물선 입항 금지 등 부두 운영이 영구 중단된다.

## 범죄 없는 안심 공중화장실 만든다

‘국민안심’ 선도사업 선정… 3곳 시설개선·비상벨 등 설치

남구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중화장실 3곳의 시설이 안전 위화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남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시·구비 등 총 사업비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엔조약공원과 유엔기념공원주차장 평화공원 3

개 공중화장실의 노후 시설을 고치고 조명과 내장재 등을 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화장실로 개선한다.

또 인근 경찰서에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비상벨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에 공중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LED 디자인 간판도 달 계획이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비해 플래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탐지장비는 남구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와 주민이면 누구든 무료로 빌려 이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의 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모에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고 부산에서는 남구가 유일하다. ☎607-4442

#### 지 면 안 내

- 남구 12경-황령산 야경 4면
- 한국·캐나다 70년 우정의 시작 5면
- 우암동 공순대를 아십니까 7면
- 돌 맞은 남구 치매안심센터 10면
- 남구와 남구는 친구사이 11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